"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또 다른 중앙집중 초래"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TF 광주 순회 토론회

수도권 편입된 충청권 비대
호남권 낙후·쇠락 심화 우려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로봇 지방세 신설 등 촉구

지난 2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국가균형발전 방안과 관련 불균형 초래 원인을 분석하고, 기반시설 미비, 경제 규모 미흡, 인구 감소 등이 심각한 지역부터 정부의 집중적인 균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도권으로 편입된 충청권만 비대해지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호남권은 인구·경제 등 각종 지표에서 영남권에 이어 충청권에도 뒤지는 신세로 전락하는 등 호남권의 영향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위원장 김승남)은 지난 25일 3시 광주시의회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가 전국을 순회하며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의 진행으로 광주와 전남이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함께 이루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사람중심 미래도시 광주·전남의 비전을 공유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행정수도 이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남부권(호·영남) 선도 지원 필수'라는 발제문에서 "세종시 건설 이후 충청권 인구·경제력 집중이 시작됐으며, 대덕연구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신행정수도까지 조성되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민간투자 등이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낙후지역과 공공기관이 적은 지역에 앞으로 중점 이전해야 하며, 따라서 대전혁신도시 조성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소멸위기지역 집중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에는 ▲공공기관 우선 배정 ▲국책사업 우선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축소 ▲농어촌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국가보조금 차등 지원 등을 담아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이사는 "국토 공간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아니라 중부권(수도권+충청권)과 남부권(호남권+영남권)으로 나뉘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호남권의 낙후와 쇠락이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유영태 조선대 교수는 '사람 중심 미래형 도시 광주전남 코로나 19 이후 광주산업경제 뉴딜'이라는 발제문에서 "분산형 초연결 도시 광주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안보, 로봇 및 자동화 기반 스마트 팩토리, 자영업플랫폼 기반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도시농업식량안보, 문화예술교육관광 네트워킹, 고독치유도시 등의 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로봇세 관련법을 지방세로 제정하고 주민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문화, 관광, 오락, 교육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한시적인 중단과 지방분권, 지방재정 자립 강화, 플랫폼 경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이민권 광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완성은 제2의 중앙집중을 초래한다"며 이와 관련해 타 지역에 대한 발전 전략을 요구했고,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호남은 일제강점기에는 착취와 수탈의 대상이었으며, 군부독재시절에는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며 호남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조했다.

김종원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공지능대학원장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환경을 갖추기 위한 미래형 공용인프라, 공통플랫폼,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협업 생태계 등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이 디지털 환경이라도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민간투자가 부족한 광주에 대한 공공투자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TF 단장 우원식 국회의원은 "광주·전남지역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완성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낙후한 호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온라인 토론회로 진행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을 통해 생중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북정상 피격 사건 前 친서 주고 받아…남북관계 반전 계기 찾나

청와대 北사과와 함께 공개
남북 동포 안녕 기원 내용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청와대가 지난 25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 위원장에게 먼저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나흘 뒤인 12일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발송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정상의 친서 전문을 공개했다. 친서 전문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김 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에게 알려드리도록 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서 실장은 설명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친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 상황에서 집중호우, 수차례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며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이겨낼 것"이라며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답신에서 "대통령의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과 남녘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나아가 "끔찍한 올해의 이 시간들이 속히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차례로 기다릴 그런 날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다"며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과 행복이 제발 지켜지기를 간절히 빌겠다. 진심을 다해 모든 이들의 안녕을 기원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북한군의 우리 측 민간인 사살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한 것도 친서 교환으로 정상 간 신뢰를 유지해 왔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이 친서 교환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살려가려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북측의 우리 민간인 사살 사건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北 피격 사건, 김정은 위원장 사과로 새국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개선이냐 악화냐 '기로'

정부 고위급 잇단 방미
남북, 북미관계 개선 논의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악재로까지 거론됐던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총격살해 사건이 지난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적인 공식 사과 표명으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세에 몰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남북 정상이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정상 간 신뢰가 재확인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16~20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고 한미 현안을 논의, 남·북·미 간에 새로운 활로가 마련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27일 "이번 방미를 통해 우리 측은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미 행정부 및 조야의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자 현안과 함께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고 한미 모두 북한의 태풍 피해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힌 상황인 만큼 한반도 정세를 공유하고 남북, 북미 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이번 방문과 종전선언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9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방미한 데 이어 청와대와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을 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킬 '깜짝 선언'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완벽한 수습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북미협상 공전 등 난관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남북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는 신중론도 높다. 우선 월북 시도와 시신 훼손 여부 등 남북 사이의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도 오리무중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이 '북한군의 한국 국민 사살'인 만큼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여기에 야권의 총공세도 부담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있어 악재지만 또 하나의 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사안을 남·북·미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도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허 균 〈도문대작〉